

# 2014 서울7급 지방자치론

## (2014.6.28 시행)

예년의 지방자치론도 그랬지만 이번 서울7급 지방자치론은 따로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지 않고 2014 선행정학 지방자치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90점정도(문9 및 문16 제외)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출제였다.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7급의 지방자치론의 경우 과연 힘들게 별도의 교재와 강의를 꼭 들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곧 출간되는 2015 선행정학은 행정학만으로 지방자치론까지 커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편의 이론과 문제를 대폭 보완하였으니 앞으로는 2015 선행정학 한권으로 지방자치론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 
- 김종규 -

### 01. 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,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
- ② 재산의 취득, 관리, 처분에 관한 사항
- ③ 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, 임차,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
- ④ 지방세, 사용료, 수수료,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, 징수를 계율리한 사항
- ⑤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

[답] ① 우리나라 주민소송은 납세자대표소송으로 위법한 재무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. ①은 해당되지 않는다.

### 02. 다음 중 우리나라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의 필수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
- ② 사무국장의 선출
- ③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의 심의 및 편성
- ⑤ 규칙의 제정 및 개폐

[답] ③ ③만 해당한다.

- 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불신임의결대상이 되지만 단체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.
- ②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직공무원이다.

- ④ 예산의 심의·의결이 의회의결대상이다.
- ⑤ 규칙이 아니라 조례

### 03.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업무상 지연이 빈번히 일어난다.
- ② 중층제에서 광역행정 및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맡고,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생활권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아 분담처리 할 수 있다.
- ③ 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·통제하기 어렵게 된다.
- ④ 중층제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하기 어렵다.
- ⑤ 중층제보다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가 좁아진다.

[답] ② ②만 옳다.

- ① 업무지연은 중층제에서 나타난다.
- ③ 통제하기 용이하다.
- ④ 조정이 용이하다.
- ⑤ 단층제는 중앙정부가 비대해지고 통솔범위가 넓어진다.

### 04.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가 아니다.
- ② 근대국가에서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치권이 주어진다.
-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으로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.
- ④ 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.
- 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.

[답] ⑤ ⑤만 옳다.

- ①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이다.
- ② 자치권은 국가의 용인이 필요하다.
- ③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헌법(제117조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아니라

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05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처리를 게을리 할 때,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?

- ① 직무이행명령 - 대집행
- ② 서면시정명령 - 취소
- ③ 회계감사 - 시정명령
- ④ 정지 - 취소
- ⑤ 취소 - 대집행

[답] ① ①이 옳다. 지방자치법(170조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·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·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고,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·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06.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없다.
- ②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.
-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.
- ④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.

[답] ④ ④만 옳다.

☑ ①② 월정수당 의정활동비, 여비 등을 지급한다.  
④ 지방의원은 공사임직원 등 공직을 겸할 수 없다.  
⑤ 지방자치법(제34조)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07. 아른슈타인(S. R. Arnstein)의 주민참여의 8단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민통제 :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.
- ② 협동관계 :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.
- ③ 회유 :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·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.
- ④ 상담 :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.
- ⑤ 치료 :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.

[답] ③ ③은 1단계인 조작에 해당한다.

08.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.
- ②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지역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- ③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을 매개로 공천비리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이 낮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.
- ④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측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- ⑤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혁신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.

[답] ⑤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고착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곤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.

09. 다음 중 「지방재정법」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[답] ③ ③만 옳다.

- ① 상급자치단체장(시도지사)을 거쳐야 한다.
-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·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을 뿐이다.
- ⑤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

10.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A시장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되었으나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면하였다.

- ① 주민소환 발의요건의 완화
- ② 주민소환투표 요건의 완화
- ③ 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재검토
- ④ 주민소환 투표함 개봉요건의 재검토
- ⑤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검토

[답] ① 위 제시문의 상황은 주민소환 대상사유가 특정되지 않고, 투표요건이 너무 까다로와 투표함을 개

봉조차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가 지역사회 분열과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. 발의요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. ③의 경우 소환대상을 절차상 하자 등 사소한 것보다는 부패·비리와 연루된 지방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.

11.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.
-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.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.
- ④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.
-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.

[답] ⑤ ⑤만 옳다.

- ① 전액 교부해야 한다.
- ② 보통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.
- ③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하여 교부하는 것이 옳지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
- ④ 분권교부세에 해당한다.

12.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.
- ② 지방자치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- ③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.

- ④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방지, 행정의 전문화,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.
- ⑤ 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.

[답] ④ ④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.

**12.** 다음 중 「지방공기업법」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?

- ① 수도사업 - 지방도로 - 주택사업
- ② 토지개발사업 - 주민복지 - 하수도사업
- ③ 지방도로 - 자동차운송사업 - 지방소방
- ④ 궤도사업 - 지방세 부과징수 - 공업용수도사업
- ⑤ 하수도사업 - 토지개발사업 - 공유림 관리

[답] ① ①만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이다.

●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

- 1. 수도사업(마을상수도사업 제외)
- 2. 공업용수도사업
- 3. 궤도사업(도시철도사업 포함)
- 4. 자동차운송사업
- 5. 지방도로사업(유료도로사업만 해당)
- 6. 하수도사업
- 7. 주택사업
- 8. 토지개발사업

**14.**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
- ④ 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7일 이내에 발의할 수 있다.
- ⑤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.

[답] ③ ③만 옳다.

- ☑ ① 19세 이상 주민이다.
- ②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청구권은 없다. 청구권은 지방의회, 주민, 단체장에게 있다.
- ④ 주민투표 발의는 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다.
- ⑤ 주민투표사무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한다.

**15.**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위사무와 단체 및 기관 위임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·예산안을 제출하며,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하는 발의권을 가진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[답]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. 따라서 우리는 단체장우위의 기관대립형이라고 한다.

**16.** 지방자치와 민주성,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?

- ① 무랭(Leo Moulin)과 랑그로드(Georges Langrod)는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 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.
- ② 토크빌(Alexis de Tocqueville)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

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.

- ③ 콕번(Cynthia Cockburn)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.
- ④ 제임스 메디슨(James Madison)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.
- ⑤ 제임스 브라이스(James Bryce)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.

[답] ④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(James Madison)은 3대 제퍼슨의 분권주의에 대항하여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.

- ① 랑고르드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부정한 단체자치 학자이다.
- ② 토크빌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.
- ③ 제임스 브라이스의 주장이다.
- ⑤ 제임스 브라이스는 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주어 민주주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였다.

17. 「지방재정법」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채란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에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를 말한다.
- ② 지방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,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.
- ③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,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분권화도 촉진되어야 한다.
- ④ 지방채는 발행하는 회계의 소속에 따라서 일반회계채와 공기업특별회계채,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눌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 할 수 있다.

[답] ⑤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다.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채발행,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에만 안전부장관이 승인이 필요하다.

18.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난다.
- ②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.
- ⑤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[답] ③ ③만 옳다.

- ① 중앙정부와 동일하다(1.1~12.31)
- ② 기금은 조례로만 설치가능하지만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가능하다.
- ④ 계속비에 해당한다.
- ⑤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.

19. 광역행정의 일반적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사회·경제권의 확대
-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
- ③ 산업·경제의 고도성장
- ④ 규모경제의 요청
- ⑤ 행정능력 향상의 요청

[답] ② ②는 광역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필요성이다.

20. 다음 중 라이트(Deil Wright)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,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.
- ②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.

- ③ 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, 주정부, 지방정부의 공적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,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.
- ④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, 주정부, 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.
- ⑤ 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, 주정부,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.

[답] ④ ④만 옳다. 중첩권위형은 각 정부가 어디까지나 독립된 실체로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교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모형이다.

- ① 분리권위형(조정권위형)에 해당한다.
- ② 포괄권위형(내포형)에 해당한다.
- ③ 중첩권위형에 해당한다.
- ⑤ 협상과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지시가 일어난다.